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545
----------	------

발의연월일 : 2020. 10. 16.

발 의 자 : 오영훈 · 남인순 · 류호정
문진석 · 서동용 · 송재호
안민석 · 양정숙 · 오영환
위성곤 · 이성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를 개정하여 2017.1.1.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여 고용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 업무와의 일원화로 국민의 고용보험 업무 처리의 불편사항을 줄이고 행정 비효율 등을 개선한 바 있음.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 존치로 여전히 고용보험 적용·보험료부과와 피보험자격관리 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행정 비효율성이 상존하고 민원처리 혼선으로 지역민의 불만이 높음. 더욱이 코로나 19 이후 고용보험 관련 업무가 늘어난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함.

이에 다른 지역민들과 달리,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할 때마다 근로복

지공단과 제주특별자치도를 각각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고용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 업무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402조제3항).

아울러, 2019.8.27. 공포되어 2020.8.28.부터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은 사업주의 신고 의무로 되었던 이직확인서 제출제도를 폐지하고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사업주에게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게 됨에 따라 제주특별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402조제3항 및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2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제15조(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16조, 제17조, 제20조”를 “「고용보험법」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제2항”을 “「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제2항·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확인의 청구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신고·청구·제출로 보며, 이에 대한 수리·확인도 고용노동부의 행위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illegible]

환지원금,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일·가정양립지원 환경개선지원금 등 고용안정 및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한정한다), 제26조(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용의 지원, 대학취업지원사업 및 전문계고등학교 취업지원사업에 한정한다), 제29조제1항(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한정한다), 제31조(중소기업컨소시엄사업과 우선선정직종 훈련사업의 지도·감독에 한정한다),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과 고용지원 기반의 구축 등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다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전문인력의 배치사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과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직업·훈련 상담 등의 직업지도에 관한 기법의 연구·개발·보급, 고용정보의 제공·직업지도·직업소개 평가 및 지원, 고용보험사업에 관련된 전산망 운영은 제외한다), 제35조, 제53조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multiple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 background is white, and the lines are light gray. There is no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ge.

④ 「고용보험법」 제43조 제1
항 · 제2항 · 제4항

기관장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
--------------------------	----------------